
최근 남북관계의 이해

- 북한의 강경 위협 조치, 당장 중단되어야 -

2009. 6. 1.

목 차

I. 갈수록 심해지는 북한의 강경조치 1

II. 우리 정부는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추구 6

붙임 :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

1. 갈수록 심해지는 북한의 강경조치

□ 북한 핵실험 → 미사일 발사 → 어디까지?

○ 북한은 5.25 2차 핵실험을 강행

《 보도내용 》

-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2차 핵실험 성과적 진행
-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핵실험 진행, △핵무기 위력 강화, △핵기술 발전 관련 기술적 문제 해결
- 핵실험 성공은 △혁명적 대고조, △150일 전투를 고무
- 핵실험은 △자주권·사회주의 수호, △한반도 평화·안전 보장에 이바지

※ 우리 기상청(관측소)은 5.25 09:54 함북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4.5의 인공지진 감지 사실 발표

○ 5.25 이후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(6.1 현재까지 6발 발사)

○ 5.27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성명 발표 : 정전협정 부인

- 우리 정부의 PSI 「전면참여」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, 사소한 적대행위에도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 할 것임.
-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임.
- 당면하여 서해 5개섬(백령도, 대청도, 소청도, 연평도, 우도)의 법적지위와 그 주변수역의 안전향해를 담보할 수 없음.

⇒ 북한은 지난 4.29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위협조치들을 예고

- △ 제2차 핵실험, △ ICBM 발사시험, △ 경수로 발전소 연료 자체 해결(우라늄 농축) 등

□ 북핵실험 : 충격과 실망, 그리고 문제점

① 남북 7천만 주민의 생존권 위협

- 북한의 핵개발은 우리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사안
- 5천년 역사와 우리 후손의 삶의 터전이 북한의 핵 위협에 노정

② 한반도 및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

-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은 「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」 정면 위반이며,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
- 동북아에서의 핵무장론 등 소모적 논쟁 유발
- 북한의 핵개발은 NPT 및 전세계적 핵확산 금지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

③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

-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 금지를 규정한 UN안보리 결의 제1718호 위반
- *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'5.25일(현지시간) 북한의 2차 핵실험은 "명백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규탄한다"는 입장을 공식 발표

④ 한반도의 생태환경 파괴 및 북한 주민의 인명과 안전은 도외시

- 환경 전문가들은 중·장기적으로 한반도 생태환경이 파괴될 것으로 우려
- 아울러 북한의 기술 수준이 의심스러운 만큼 폭발력 예측 실패, 지질특성 파악 실수 등으로 추가 핵실험시 방사능 누출 가능성 상존
- * 미국은 '45년 이후 936회의 핵실험을 실시(77%는 지하 핵실험), '70년대까지는 몇 차례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
- * 소련은 522회 지하 핵실험 중 약 100회에 걸쳐 방사능 물질이 대기중으로 방출, '87.8월 지하핵실험 당시에는 방사성 낙진이 유럽전역에서 검출
- 특히 북한은 2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도 함북 일대에서 주민 소개 등 어떤 사전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
- ※ 핵실험 인근 청진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핵실험 진동에도 불구하고, 현장 인부들은 그대로 건물에 매달려 일을 하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될까 우려(핵실험 당일 체북 재중동포 사업가)

⑤ 북한 주민의 경제난 심화

- 북한은 핵실험으로 외부 지원을 스스로 닫고, 이로 인해 경제난은 더욱 가중
- 이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식량난 해소 등 주민들의 생활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

□ 정전협정 무효화 : 통하지 않는 억지주장

① PSI는 북한을 겨냥하는 해상봉쇄 활동과 무관

- PSI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아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지키려는 국제협력체제
- 현재까지 94개국이 참여,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

②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은 정전협정 준수

- 북한은 '94년 군사정전위원회를 판문점대표부로 교체한 이래 '정전협정'의 구속을 받지 않겠다는 주장을 상투적으로 해왔음.
- 지속적으로 정전협정 무력화를 주장하면서,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
- 한반도 평화는 정전협정을 준수하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남북대화, 협력을 통해 구축됨을 인식할 필요

➡ 우리 정부와 유엔사는 정전협정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, NLL도 서해 해상경계선으로 확고히 지켜 나갈 것임.

□ 북한의 강경조치는 지난해부터 지속

- 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 3월말부터 대남 강경조치를 취했음.
 - 3.27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우리측 당국자 철수
 - 3.29 모든 남북 당국간 대화 중단 및 접촉 거부
 - 7.11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으로 남북관계의 어려움이 가중
 - 11.12 적십자 중앙위 성명을 통해 판문점 남북직통전화 단절
 - 12.1부터는 △군사분계선 통행 제한·통제, △경제협력협약사무소 폐쇄, △개성관광·남북열차 운행 중단 △개성·금강산 상주 체류인원 절반 감축
 - '09.1.17에는 북한군 총참모부는 남북간 '전면대결태세 진입' 발표
 - 1.30 조평통은 '정치·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합의사항 무효화', '서해해상불가침 경계선 합의폐기' 선언
 - '09.3.5 한미합동 연습기간 동안 북한의 동해상 영공주변을 통과하는 우리 민항기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위협
 - '09.3.9 「키리졸브 훈련일 빌미로 군 통신선 차단 및 육로통행 차단
 - '09.3.9, 3.13~15, 3.20 세 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육로 통행 차단
 - '09.3.30 북한은 개성공단 우리 근로자 억류
 - '09.4.5 북한은 함북 무수단리 소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
 - '09.4.14, 외무성 성명,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 천명
 - △ 6자회담 참가 및 합의사항 이행 거부, △ 핵억제력 강화, 핵시설 원상복구 및 정상가동, △ 폐연료봉 재처리
 - ※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감시요원 철수요구(4.14)에 따라 IAEA 검증팀(4.16) 및 미관계자(4.17~18) 출국

○ '09.4.18, 군 총참모부 대변인 기자회견, 우리 정부의 “PSI 전면참여 등을 통한 그 어떤 압력도 北에 대한 선전포고”라고 강조

* “PSI에 참가한다면 北에 대한 선전포고로서 우리는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”(3.30 조평통 대변인 담화)

○ '09.4.25 폐연료봉 재처리 시작 언급(외무성 대변인)

- “시험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 시작” 발표

○ '09.4.29 외무성 대변인 성명, 추가조치 이행 시사

- △ 제2차 핵실험, △ ICBM 발사시험, △ 경수로 발전소 연료 자체 해결(우라늄 농축) 등

○ '09.5.15 북한측은 개성공단의 기존 법규와 계약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

-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, 노임,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와 계약 무효

-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

○ '09.5.25 北, 2차 핵실험 강행

○ '09.5.27 우리의 PSI 참여에 대하여 북한군 관문점 대표부 성명 발표

- △PSI 참여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, △정전협정 파기, △ 서해5도(백령도, 연평도, 대청도, 소청도, 우도)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 수역의 담보 불가 등

② 북한은 또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대남 비난을 지속하고 있음.

○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'08.4.1부터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한 이후, 최근까지 약 3천회가 넘는 원색적인 비난을 지속하고 있음.

- 상대방에 대한 중상·비방과 지명공격은 남북간 중요한 합의 위반

- 상대방 최고 지도자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는 것은 상식이자 기본 예의

II. 우리 정부는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추구

□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상생공영정책 정립

- 정부 출범('08.2) 이후, 새정부 국정철학에 따라 통일정책 방향을 「상생과 공영」으로 결정
 - 남북이 윈-윈(Win-Win)하자는 새로운 정책비전을 제시
 - 이는 남북간 「평화공동체」, 「경제공동체」, 「행복공동체」를 이루어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자는 구상
- 이러한 남북관계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 비핵·개방·3000구상임.
 - 「비핵·개방·3000」구상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,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내놓은 새로운 구상임.
 - 이것은 미래 지향적·평화적인 것으로, 무엇보다도 역사의 발전을 압축적으로 해나가자는 것임.
 - 이는 북한을 폐쇄와 고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님.
 - 남북이 「동반퇴보」가 아니라 「동반 전진」을 하자는 것임.
 -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고 남북이 공존공영하자는 것임.

□ 진정성 있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

- 출범 초부터 일관되게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추진
 - 대통령께서 직접 남북상설대화기구 설치 등 5차례에 걸쳐 대화를 제의('08.4.17, '08.6.6, '08.7.11, '08.8.15, '08.9.22)
 - “과거 남북 간에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, 비핵화공동선언 6·15공동선언 10·4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” 제의('08.7.11)

- 2009년 들어서도 대통령께서 지속적으로 남북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남북대화 의지 표명
- 통일부장관도 '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자와 언제, 어디서나, 어떤 의제이든, 또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서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'는 점을 일관되게 천명

《 2009.6.1, 제16차 대통령 라디오 연설 》

- 지난 주 북한의 2차 핵실험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모두에 큰 실망과 충격을 주었음.
 - 전 세계가 경제위기 극복에 여념이 없고, 더욱이 우리가 상중에 있음에도, 늘 '우리민족끼리'를 주장하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음.
 - 그리고 미사일을 연달아 쏘아댔음.
-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의연하고 차분했음.
 - 충격적인 핵실험에도 불구하고, 우리 사회와 시장은 안정을 유지했음.
 -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,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음.
 - 우리는 평화를 간절히 바라지만, 위협에는 당당히 맞설 것임.
- 정부는 완벽한 안보태세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빈틈없는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음.
 - 국제사회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북한의 생각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.
 - 핵무기로 우리와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야말로 북한 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일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함.
- 북한도 아직 늦지 않았음
 - 북한당국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한민족의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것임.
- 북한은 상생과 공영의 길을 굳이 외면하고, 파국을 재촉하는 길로 들어서지 말아야 함.
- 정부는 앞으로도 침착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잘 대처해 나가겠음. 결국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꼭 나오도록 하겠음.

○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

- 정부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조건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작년 5-6월 북한에 옥수수 5만톤 지원을 제의
-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(WHO와 UNICEF 등)를 통한 북한 농촌개발·보건의료·사회복지 등 인도적 사업을 지원
-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, 납북자 피해보상 지원 등 노력

○ 남북교류협력의 지속적인 발전 지원

- '08년 남북왕래인원은 186,775명으로 전년 대비 17.3% 증가
- '08년 남북교역은 18.2억달러로 전년 대비 1.2% 증가

○ 개성공단은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속 유지

- 4.21(火) 개성에서 남북은 개성공단 현안 문제 협의를 위한 접촉을 진행
 - 북한은 토지임대차계약, 토지사용료, 북측 근로자 임금 등에 대한 특혜 조치 재검토 일방 통보
 - 우리측은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부당성 지적 및 즉각적인 신병인도 요구, 남북간 긴장조성 및 국가원수 비방 행위 중단, 출입·체류 제한 조치 철회 등을 요구
- 5.15 북한은 개성공단의 기존 법규와 계약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

➡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북간 상생공영의 발전모델인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·발전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 견지

- 현재 △가동기업 수는 106개, △생산액은 6억 달러로 △북한근로자는 3만9천명 수준

□ 정부는 북한의 강경조치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남북관계를 위해서 유연한 정책을 추진

○ 북한의 비난과 강경조치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며 침착하고 의연하게 대처
- 이에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 정부를 위협하고 비난했음.

○ 따라서 그동안의 남북관계에서 우리는 유연하고 북한은 강경했던 사실이 분명

- 이러한 사실을 누구도 객관적으로 부인할 수 없음.

- 이러한 대북정책기조에 대한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지지

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

① 정부의 대북정책은 매우 유연합니다.

- 일부에서는 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실시하여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강경한 정책을 써 본 일이 없습니다.
- 계속해서 대화를 제의했고, 협력을 제의했으며, 이에 대비해 왔습니다.
-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화해협력·공존공영의 유연한 대북 포용정책입니다.
-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한번도 들어보지도 않고,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하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강경조치를 취함으로써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습니다.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북관계를 위해 인내하면서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.

《 대통령의 남북관계 발전 관련 주요 어록 》

- ‘이제 남북한은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공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함.’(1.2 09년 신년국정연설)
- ‘한국이야말로 북한을 생각하고 애정을 갖고 도울 것’(1.30, SBS 원탁토론)
- ‘남북 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이며,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.’(3.2, 제90주년 삼일절 기념식)
- ‘이제 남북은 대결이 아닌 상생 공영의 길로 나아가야 함.’(3.13, 해사 제63기 임관식 축사)
- ‘현 정부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로 북한을 대하는 것일 뿐, 과거보다 경직된 정책을 펴려는 것이 아님.’(3.30, 英 파이낸셜타임즈(FT) 인터뷰)
- ‘남북관계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겪고 있지만, 한국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음.’(4.3, 韓·中 정상회담)
- ‘우리는 필요하면 (북한에) 특사를 보낼 수 있음.’(4.3, 외신 공동 인터뷰)
- (대북정책 기조에 대해) ‘무엇보다 남북관계가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상화 되어야 함.’(4.6, 여야 3당 대표 청와대 초청 조찬회동)
- ‘북한당국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한민족의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것임.’(6.1, 제16차 대통령 라디오연설)

② 정부는 정책을 승계하고 정세변화에 따라 변화를 조화시키고자 합니다.

- 모든 정책은 계속성과 변화의 조화를 속성으로 합니다.
- 지난 대북정책은 여러 가지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 등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했고, 남북간 상호 호혜적 협력을 이루지 못했으며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남남갈등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.
-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생과 공영정책은 지난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되, 국민의 비판을 받은 점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.
 - 확고한 원칙을 지키면서, 국민합의 하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.
 - 이를 통해 남북관계를 한단계 더 높게, 실질적, 생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.

③ 정부는 6.15공동선언과 10.4선언을 존중합니다.

- 일부에서는 정부가 6.15 공동선언과 10.4선언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있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
- 정부는 6.15 공동선언과 10.4 선언에 대해 그간의 남북간 모든 합의들의 합의정신을 존중하며 협의를 통해 상호 존중과 현실을 바탕으로 실천가능한 이행방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.
 - 즉, 양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이행·추진하기 위해 먼저 남북 당국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.
 - 이를 위해 2008년 4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6.15 공동선언과 10.4 선언의 이행방안을 협의할 용의가 있으며, 이를 위한 대화를 북한에 제의했었습니다.
- 그러나 북한은 우리가 6.15 공동선언과 10.4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대화를 중단함은 물론 교류협력을 위축시키고, 일방적으로 과거 합의를 폐기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
④ 「비핵·개방·3000」은 원칙있는 대북 포용정책입니다.

- 일부에서는 「비핵·개방·3000」구상이 대북 적대시 정책, 先핵 폐기론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「비핵·개방·3000 구상」은 북한의 핵 폐기 결단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남북한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일대 프로젝트입니다.
 - 북한이 핵 폐기의 결단을 내린다면,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10년 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,000 달러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것입니다.
 - 이를 위해 북한의 핵 폐기 진전 상황에 따라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경제재건 및 주민생활 개선 등을 위한 '포괄적 패키지 형태의 지원'을 제공하게 된다는 구상입니다.
- 특히, 『비핵·개방·3000 구상』은 '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'의 개념 안에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지니고 있으며, 구상 자체가 하나의 큰 열개입니다.
 - 세부 내용은 향후 남북대화 등을 통해 유효적절하게 채워나가게 될 것입니다.
- 또한, 『비핵·개방·3000 구상』은 통일비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 - 同구상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, 남북한 인적·물적 교류가 심화되면서 사실상 남북사이의 경제공동체가 실현될 것입니다.
 - * 북한 주민 1인당 국민소득 3,000 달러가 된다는 것은 중산층 성장을 뜻하며, 북한이 이 수준에 도달할 때 남북간 통일에 관한 논의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임.

⑤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.

- 정부는 개성공단은 안정적으로 유지·발전해 나간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.
- 정부는 개성공단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△ 소각장 준공('08.6, 12톤), △ 탁아소 설계 및 건축계약('08.12) △ 아파트형 공장 준공('08.12) 실질적인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.
 - 또한 출퇴근 버스 100대를 추가 투입하여 근로자의 공급여력을 확대하였습니다.
- 그러나 북한은 5.15 북한은 개성공단의 토지임대차계약, 토지 사용료, 북측 근로자 임금 등 기존 법규와 계약을 지키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.
- 우리의 근로자도 장기간 억류하고 있습니다.
- 북한은 억류된 우리 근로자부터 석방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거 합의와 계약을 지켜야 합니다. /끝/